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19. 3. 5.(화) 15:00
- 장 소: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다목적실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 의정토론회 진행 안내

##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9. 3. 5.(화) 15:00 ~
- 장 소: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다목적실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 진 행 흐 름

| 시간 부터 | 시간 까지 | 소요 | 내 용 | 비 고 |
|---|---|---|---|---|
| | | | **< 개 회 식 >** | |
| 15:00 | 15:04 | 4′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 15:04 | 15:07 | 3′ | 내빈소개, 개회사 등 | 김 연 위원장 |
| 15:07 | 15:10 | 3′ | 축 사 | 유병국 의장 |
| | | | **< 토 론 회 >** | **※좌장: 김 연 위원장** |
| 15:10 | 15:30 | 20′ | **주 제 발 표**<br>‣ 임원정규/성평등이음센터장<br>☞ 저출산, 젠더관점으로 교차 | |
| 15:30 | 16:30 | 60′ | **지 정 토 론**<br>‣ 김영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br>‣ 문지희 /논산 마을활동가<br>‣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br>‣ 신희정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br>‣ 박주영 /연합뉴스 기자<br>‣ 이태규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 | 토론자 전체 |
| 16:30 | 16:55 | 25′ | 종 합 토 론 | 참여자 전체 (발제자,토론자,청중) |
| 16:55 | 17:00 | 5′ | 정 리 및 폐 회 | 좌 장 |

# 목　　차

## ■ 주제발표

☞ 저출산, 젠더관점으로 교차 ········· 3
임원정규(성평등이음센터장)

## ■ 지정토론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 37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저출산과 초고령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거버넌스 ········· 39
문지희(논산 마을활동가)

☞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여성단체 역할 제고 ········· 43
최연숙(당진시의회 의원)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 47
신희정(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바보야,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야” ········· 51
박주영(연합뉴스 기자)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구현 ········· 55
이태규(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

# 주제발표

# 저출산, 젠더관점으로 교차

**임원정규**

성평등이음센터장

# 저출산, 젠더관점으로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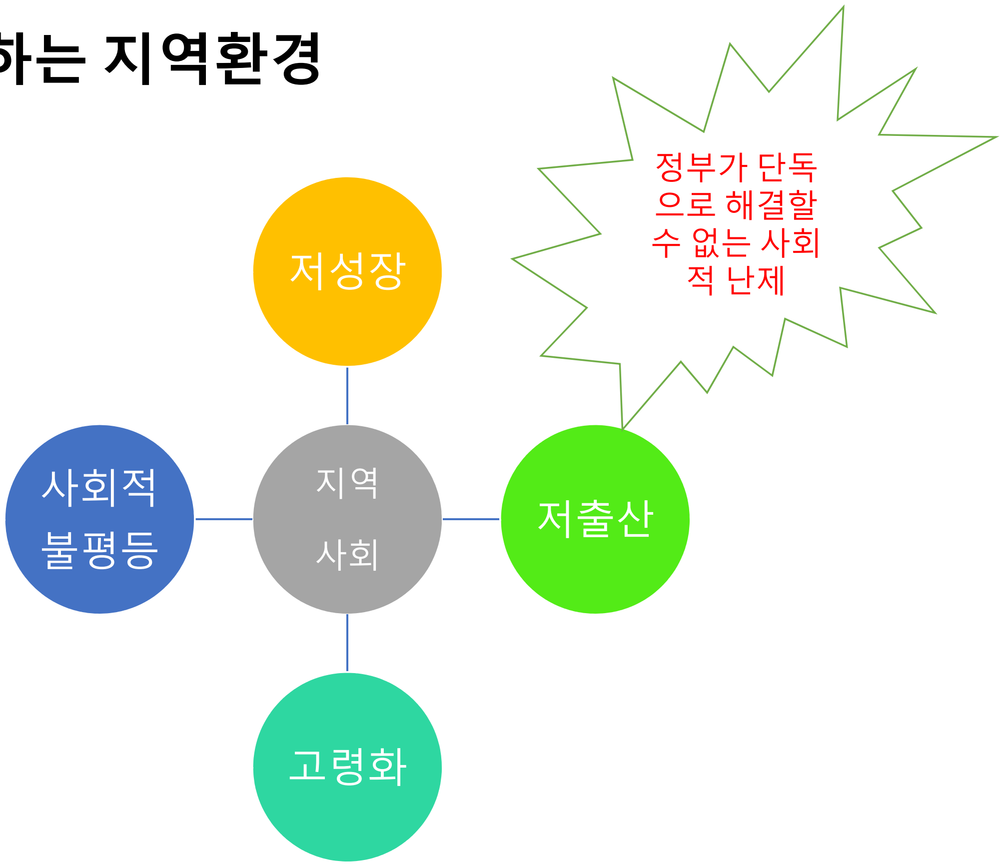
**임원정규**
성평등이음센터장

저출산, 젠더관점으로 교차

임원정규 성평등이음센터장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1. 사회변화

# 급변하는 지역환경




# 사회적 여건

거세지는 사회갈등과 세대교체 양상 … "시민 의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우려되는 대기오염과 시민안전 … "이제는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

# 경제, 기술적 여건

심각한 고령화와 경제위기로 답답한 경제 상황 … "새로운 해법 찾기 필요"

증가하는 주거비 등으로 인한 위기의 시민 삶… "적극적 대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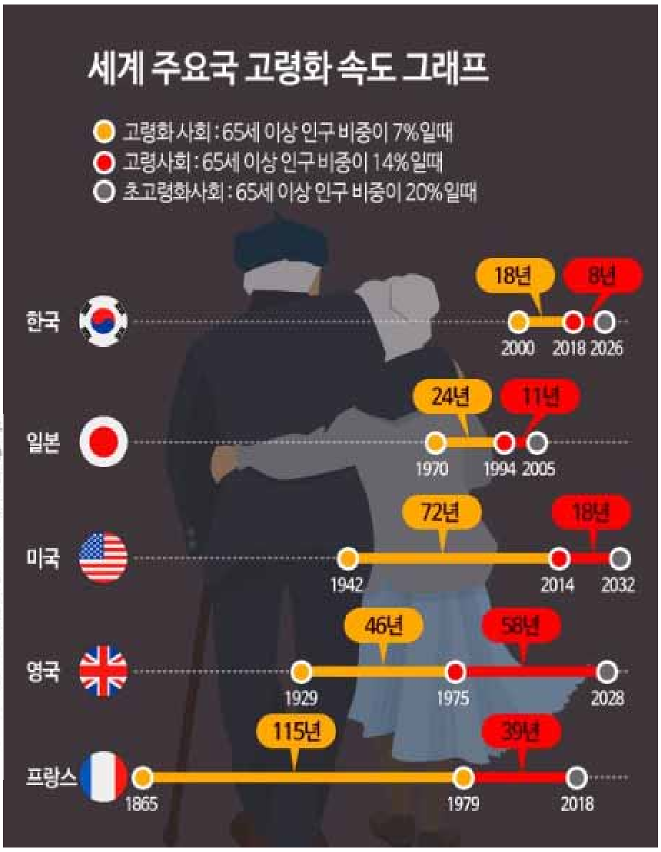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 "신속한 대응 필요"

"시민의 생활문제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개선이
주요 과제로 부상"

출처-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자료집. 2018.7.19

# 시대변화와 현대 경제체제

# 가장 빠르게
# 늙어가는 대한민국




그래픽=김승종 기자 /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프레스맨

# 2040년 서울은
# '50대도 젊은이'

| 주요 인구구조 변화 | 현재 | ➡ 2040년 |
|---|---|---|
| 생산가능인구(15~64세) | 750만 | 545만명 |
| 소비주도인구(45~49세) | 80만 | 64만2천명 |
| 가임여성(20~39세) | 150만 | 96만명 |
| 중위연령 *전체 인구의 허리층 | 39세 | 52세 |

가족구조 변화
(단위:%/자료:서울연구원)
49.8
부부+자녀 가구
1인 가구
30.1
30.8
28.9
부부 가구
23.6
19
16.3
14.8
9.3
2000년
2015
2035
〈자료:서울연구원〉

# 2. 정부 저출산정책

#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2016-2020)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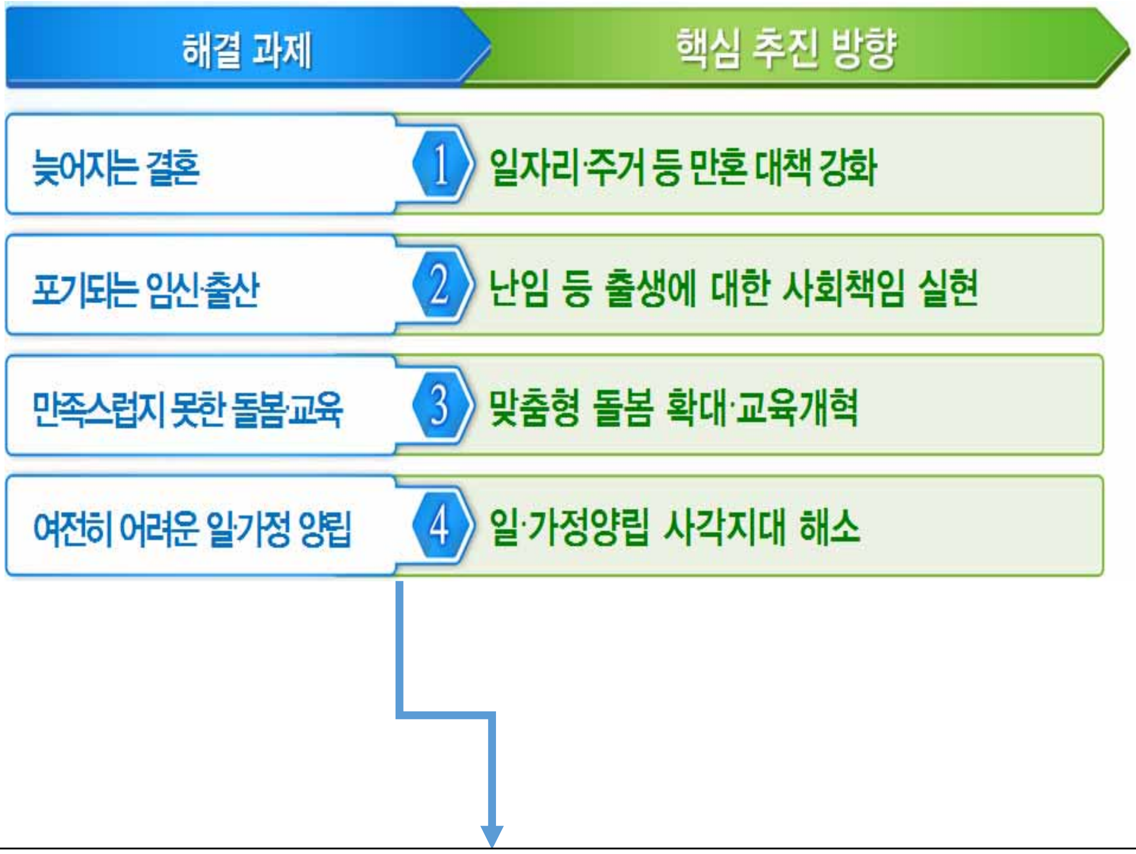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93) 1.66명 → ('14) 2.08명, 스웨덴 ('99) 1.50명 → ('14) 1.88명**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 | | | |
|---|---|---|---|
| 저출산 |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 ⇨ |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 강화 |
| | 제도 도입·기반 조성, 비용지원 위주 | ⇨ |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개선 초점 |
| 고령사회 | 기초연금·장기요양 등 노후 기반 마련 | ⇨ |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 |
| | 노인복지대책 위주 | ⇨ | **생산인구 확충, 실버산업** 등 구조적 대응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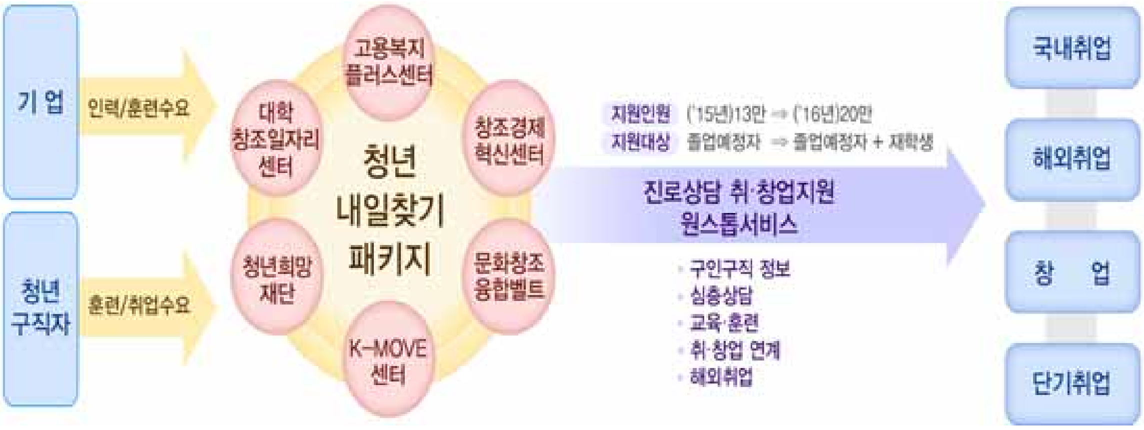
| | | |
|---|---|---|
|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 |
| 목표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br>[합계출산율] ('14) 1.21 → ('20) 1.5명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br>[노인빈곤율] ('14) 49.6 → ('20) 39% |




# 정부 저출산 대책-일자리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

- 청년고용지원을 위해 진로설계·상담,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2015년 13만명에서 **2016년 20만명**으로 확대



# 정부 저출산 대책-주택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17년까지 6만호 공급 예정**

## (육아)

취업모 출산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확대('15. 1천명 → '20. 6천명),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인센티브(월 20만원→40만원),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 인상(월20만원→30만원), 자동육아휴직제 확산,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처리기한 명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사용기간 1→2년, 횟수 2→3회)

- 부모가 믿을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확충('15. 28% → '20. 37% → '25. 45%), **초등돌봄교실 확충**('15. 24만명→'20. 26만명)**,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사회문화 확산

## (임신 · 출산)

아이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21만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패키지* 도입**, 임신·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 신설

*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17), 난임휴가제('17), 난임부부상담 센터 설치('18)

**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16), 건강보험 본인부담 20~30% → ('17) 5%, 국민행복카드로 실질적 해소

- 여성 건강증진 지원 확대 : 여성 건강 관리를 위한 만 12세 여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전액 국가 지원('16)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 80만명에 이르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양육-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 설립, 월 15만원 수준인 아동양육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 (종일반) 맞벌이, 다자녀 등 부모여건*과 가구특성**에 따라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07:30~19:30) 이용
- (맞춤반) 종일반외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약 7시간(예 09:00~15:00,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 신설
- (시간연장) 퇴근이 늦은 맞벌이 가구, 2~3교대 및 야간근무 가구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위한 '시간연장형 보육' 확대
- (시간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자 부모 등의 단시간 보육수요를 위한 '시간제 보육' 확대(`15년 230개 →`16년 380개 → `20년 687개)
- (가정양육지원) 육아휴직 부모, 영아가구 등 가정내 양육 지원을 위한 적정양육수당 지원, 양육상담 등 가정양육지원서비스 다양화

- 초등학교 1~2학년 돌봄 강화, 민간베이비시터 질 관리체계 구축,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등을 통해 학교･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 초등학교 1~2학년 등 초등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현재 24만명 수준에서 2020년까지 26만명으로 확충

-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내 돌봄 품앗이 문화를 조성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수 : ('15) 22.3만명 → ('20) 25.8만명

- 육아정보 및 조언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이웃,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55.5%)이 친정부모(15.0%)나 형제･자매(11.6%)보다 높음 (보육실태조사, '12)

-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를 신설해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인상('17)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확대 ('15. 1천명 → '20. 6천명)
-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 ('15) 956개 → ('20) 2,500개
-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1→3개월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2017년부터 강화**

##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수립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

**여성고용 활성화**

OECD 하위권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수준 향상을 위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인력 부족 분야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 추진

ㅇ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해 재택·원격근무 활용기업에 대한 장려금 제도 도입('16)

ㅇ 30대·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운영('16~ )

ㅇ 공학계열의 여학생 진출 활성화를 위해 K-Girls' Day 확대, '여대학원생 공학연구 팀제 지원' 확대 ('15. 150팀→ '20. 400팀)

## 여성가족부
## 2019년 총 1조 788억 원으로 예산 편성

<정부 전체예산 대비 0.23%>

| | |
|---|---|
| 저출생 해결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 113->218개소확대<br>한부모자녀양육예산 확대<br>아이돌봄지원시간 확대 |
| 실질적성평등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br>- 디지털피해자원스톱지원, 사회서비스일자리 증가 |
| 여성안전강화 | 성평등 문화 정착<br>- 청년참여플랫폼<br>- 성평등일자리환경추진 |

출처 : 2018.12.10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 3. 젠더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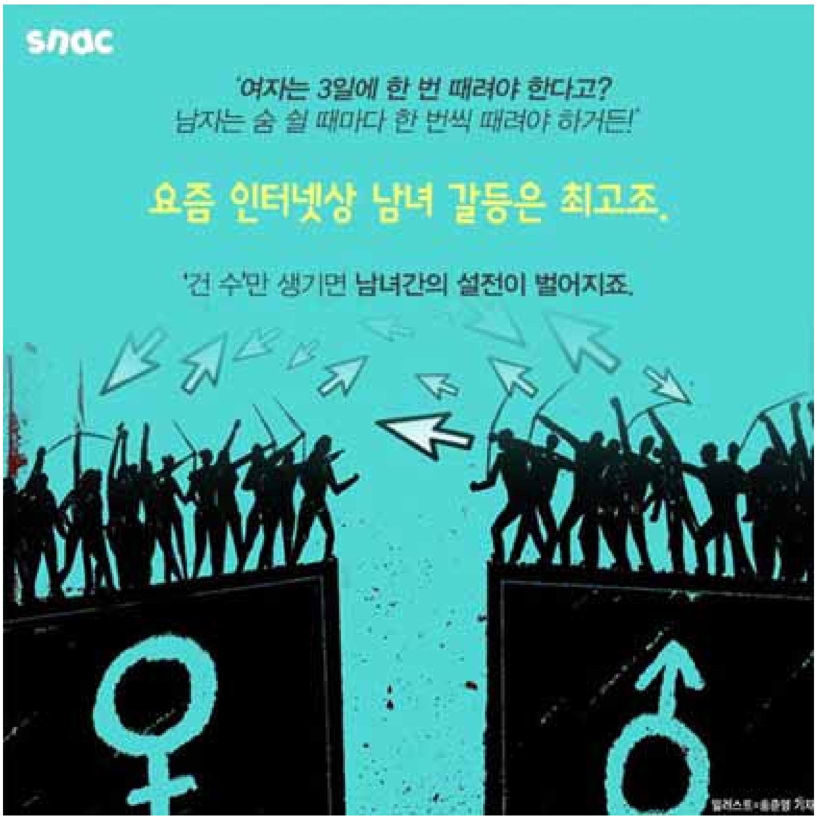
## 젠더화된 이원적 구분

| 남성적 | 여성적 |
|---|---|
| 공적 | 사적 |
| 바깥 | 안 |
| 직장 | 가정 |
| 일 | 여가/즐거움 |
| 생산 | 소비 |
| 독립 | 의존 |
| 권력 | 권력의 부재 |

출처. 린다 맥도웰. 2010. p40

• 남성은 주류로서 공적영역에 포함, 여성은 "보이지 않는 존재" 즉, 비주류로서 사적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본 기존 도시계획의 관성을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

•수평적 관계에 초첨 맞춘 성인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주체적 참여를 전제하는 성주류화 접근으로 발전하여 도시계획추진과 내용이 여성의 특성과 요구에 민감하도록 보다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 **청년**

청년은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자, 대표적인 취약계층

청년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부터 어려움(**9.4%의 청년실업률**('17.8월), 11.6개월의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17.5월), 첫 일자리의 1년 이하 계약직 비율 22.2%('16년) 등) **청년 구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63%(**청년유니온조사)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잦은 이직 반복.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5개월('17.5월)에 불과하며, 30대 청년의 37.7%가 현재 근속기간이 3년 이하에 해당됨.

한국사회 특유의 사회적, 문화적 조건으로 청년층은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조건. **나이와 경험에 따른 권위주의와 여성 청년이 집중적으로 겪는 성차별적 문화가 고용, 근로조건 상의 열악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일터에서의 인권침해가 집중.**

한국의 열악한 사회안전망 = 청년층은 집중적으로 소외된 상태.
현행 **사회안전망은 4인 가족, 정규직, 남성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음.
전체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청년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함.

## 15~29세 성별 임금격차에 대해 남녀임금근로자 분석연구

| | 남성 | 여성 | |
|---|---|---|---|
| 평균 교육년수 | 13.9년 | 14.2년 | |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비율 | 54.0% | 59.4% | |
| 평균 근속년수 | 3.6년 | 3.8년 | |
| 시간당 임금 | 10,103원 | 9,573원 | 530원 여성이 덜 받음 |
| 임금격차 분해에서 설명되지 않는 차별 | | | |

표면상 20대 여성이 뛰어나다는 인식

그러나 구조적인 성차별로 인해 여성은 임금에서 남성에 비해 작은 액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

**[출처]** 여성과 남성, 분노의 차이 | **작성자** 김공, 2017년에 나온 통계조사인 김난주(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논문 인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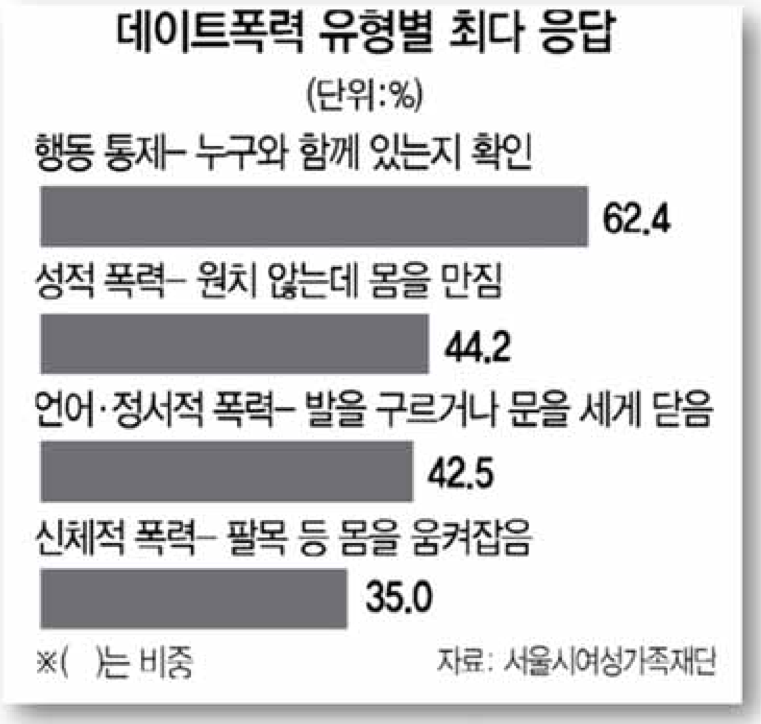
최근 3년간 **분노조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5년 5390명에서 2016년 598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특히 성별로 볼 때 **남성이 8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 20대, 30대 등 젊은 층이 68%**를 차지

출처: http://www.driveind.com/1692?category=498744 [DB손해보험 내차사랑 블로그 In:D]




'상대방에게 강요 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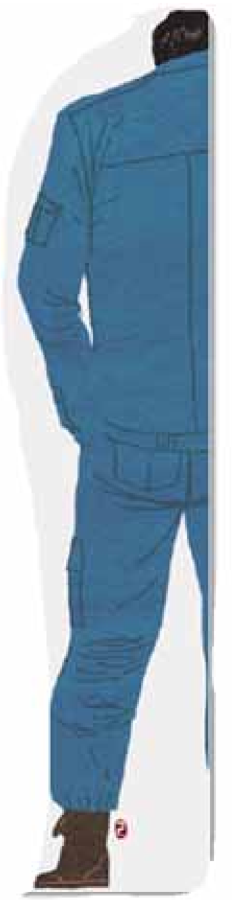
[출처] 데이트 폭력 원인과 해결방안 답을 찾아요|작성자 상큼한유자

명

- 포천 선정 세계 500대 그룹 CEO 95.2% 남성
- 세계 각국의 행정수반(대통령 또는 총리) 92.8% 남성

- 미국 수감자 비율 93% 남성
- 살인사건 가해자 79% 남성
- 자살자 66% 남성

암



블루칼라 '근육남'.. 일자리도 가정도 놓치다
이코노미스트, 환경에 적응 못한 선진국 남성 분석 게재

<자료:이코노미스트, 포천, 국제의회연맹(IPA),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7명 중 1명 특혜"
하나은행 남녀차별
남성
합격자 201명
여성
합격자 28명
합격선 467점
불합격
합격선 419점
불합격
뉴스제보 동영상 스마트폰 뉴스앱 'MBC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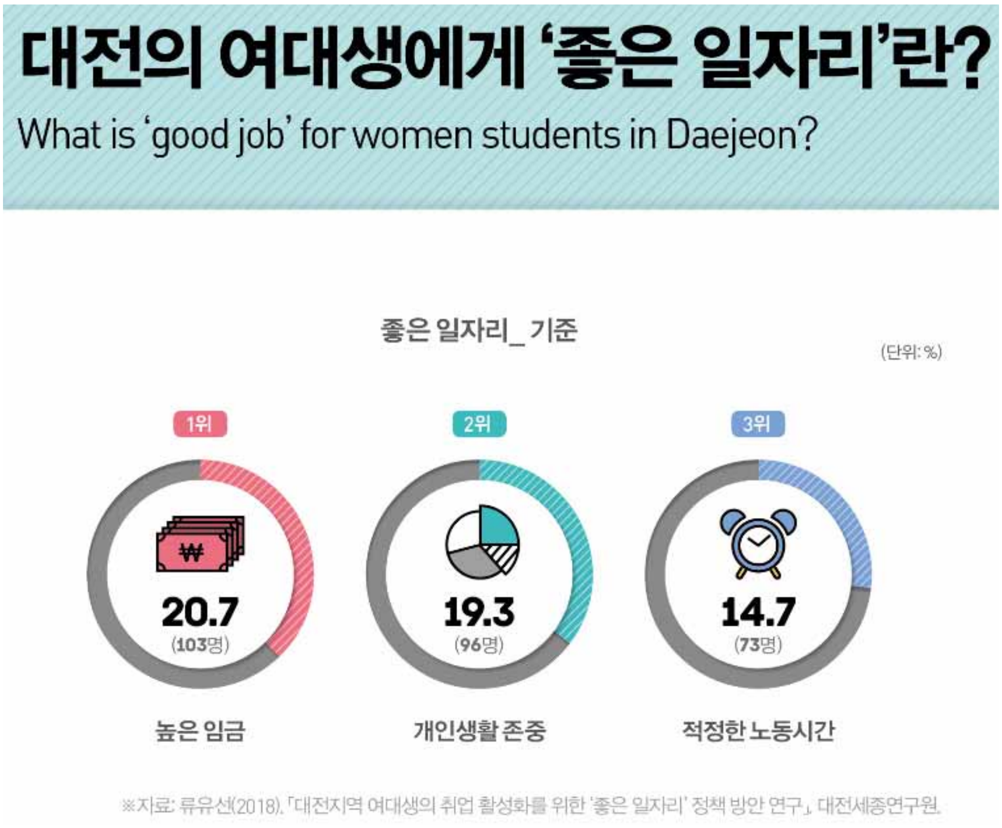
국민은행
#여자라서_
떨어졌다
응 됐고
이제 감방가고
벌금폭탄 맞자!
너네 은행
이용 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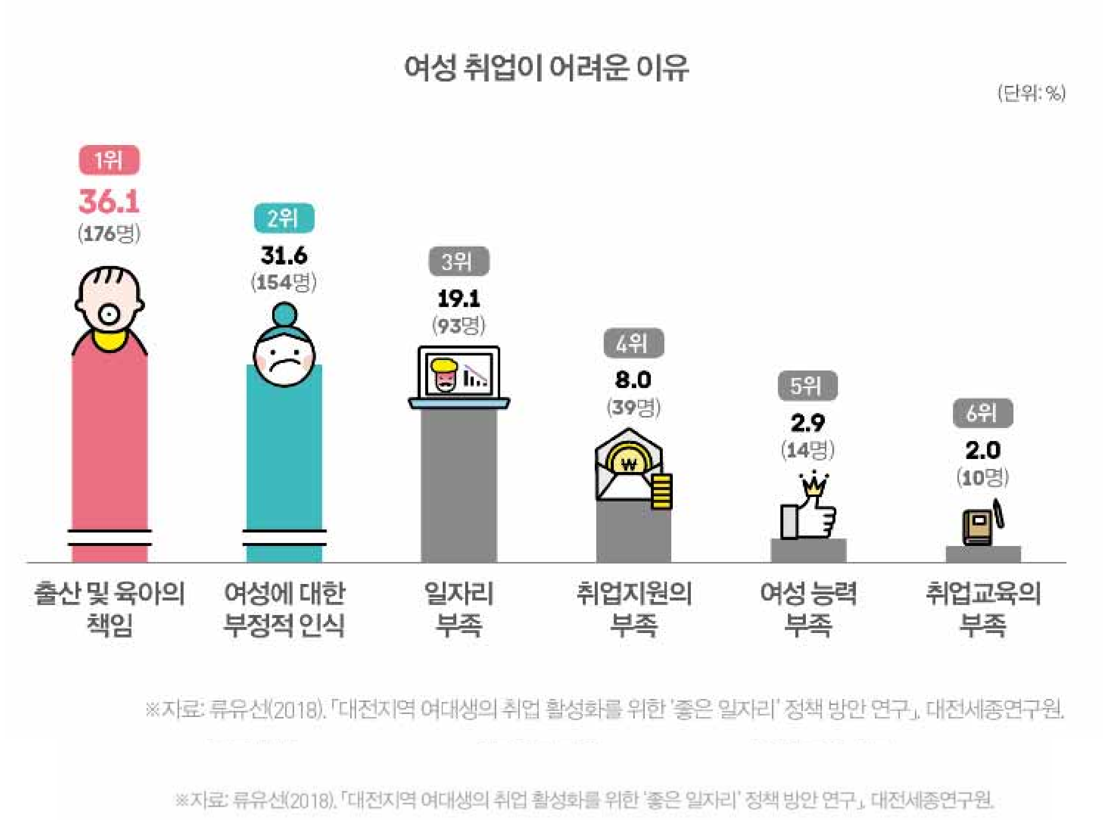
누구 꼬시려고
그렇게 입었어?
어깨 좀 주물러봐
살 좀 빼야겠다...
그렇게 입으니
가슴 작아 보이잖아.
이걸로 큰 속옷 사 입어.

2019.2.13 굿모닝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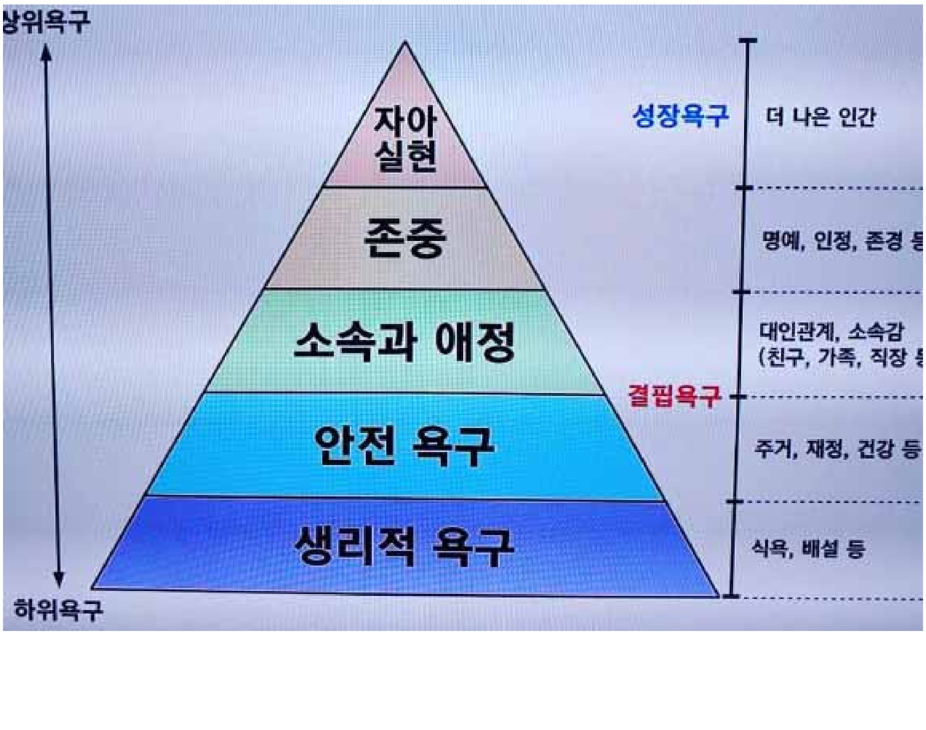
# 충남 농촌 청년여성 47% "성적 대상화"

여성정책개발원 생활실태·정책요구 조사 결과..."생활 불편으로 농촌 떠나" 46%




여성 취업이 어려운 이유
(단위: %)
1위
36.1
(176명)
2위
31.6
(154명)
3위
19.1
(93명)
4위
8.0
(39명)
5위
2.9
(14명)
6위
2.0
(10명)
출산 및 육아의 책임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일자리 부족
취업지원의 부족
여성 능력 부족
취업교육의 부족
※자료: 류유선(2018).「대전지역 여대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정책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매슬로의 욕구위계이론


상위욕구
하위욕구
자아 실현
존중
소속과 애정
안전 욕구
생리적 욕구
성장욕구
결핍욕구
더 나은 인간
명예, 인정, 존경
대인관계, 소속감
(친구, 가족, 직장
주거, 재정, 건강 등
식욕, 배설 등

## 2017 성평등 문화상

## 2018 성평등 문화상

**나만이 겪은 불합리, 당연히 받아져서 저항하지 못했던…**
**여성의 재인식과 남성의 간접경험**

## 노동의 성별분업화된 사회구조<br>여성에 대한 일생을 통한 성차별의 누적<br>남성중심적 자원분배의 결과<br>= 저출산, 고령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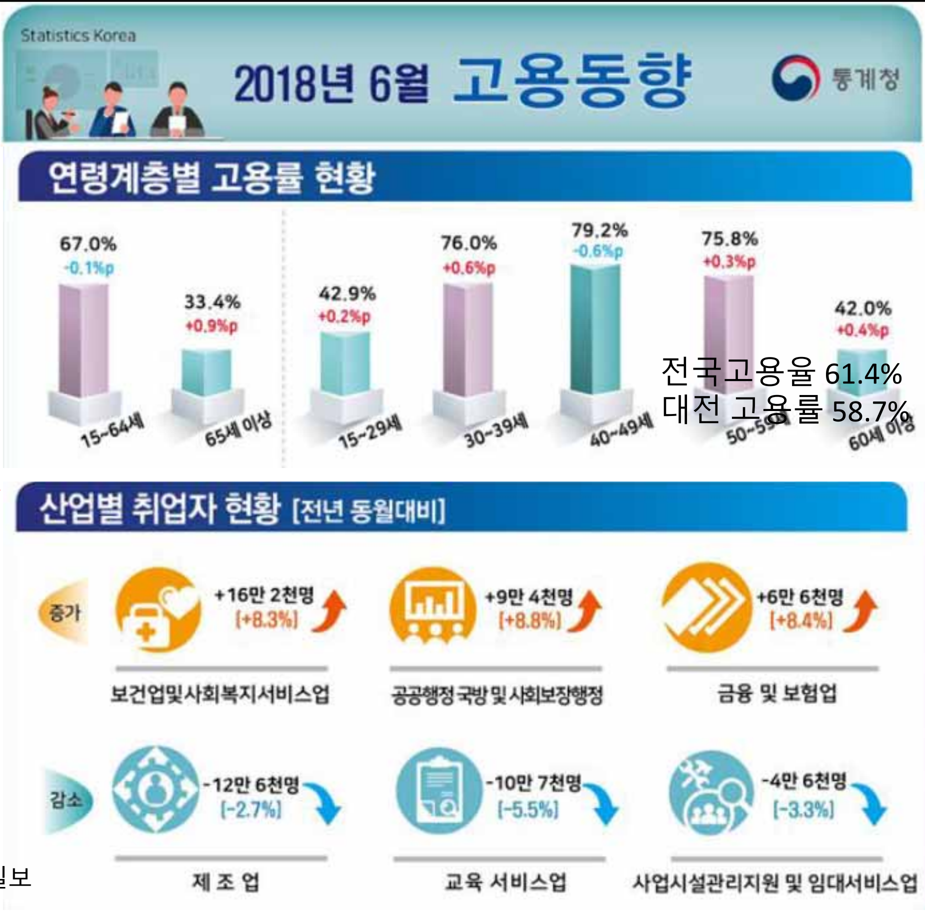
- ❖ 결혼으로 인한 가사노동, 출산 및 자녀양육의 문제로 높은 이직률과 빠른 퇴직 등 취업의 단절을 가져오며 출산 후 재취업한다해도 가족생활주기에 맞춘 간헐적 임금노동에 참여하거나 시간제노동에 참여하는 경우

- ❖ 여성은 취업기회와 승진면에서도 차별을 받으며 동일 노동에서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 -> 노후의 연금수급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노후에는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됨. 이혼이나 사별 시 여성은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 높아짐. 남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의 한계성

- ❖ 높은 고용불안정, 저임금노동, 치솟는 주택가격과 높은 보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3050세대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고, 일가족 양립 혹은 일생활 균형과는 괴리, 끊임없이 일하지만 생애에 걸친 빈곤화 위협

- ❖ 여성노인은 자녀의 출산과 육아 및 가사노동으로 인해서 여성특유의 건강문제를 지니며 유병율이 남성노인보다 높음

- ❖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체계, 직접적인 소득획득 과정으로부터의 여성의 배제, 성차별 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전국고용율 61.4%
대전 고용률 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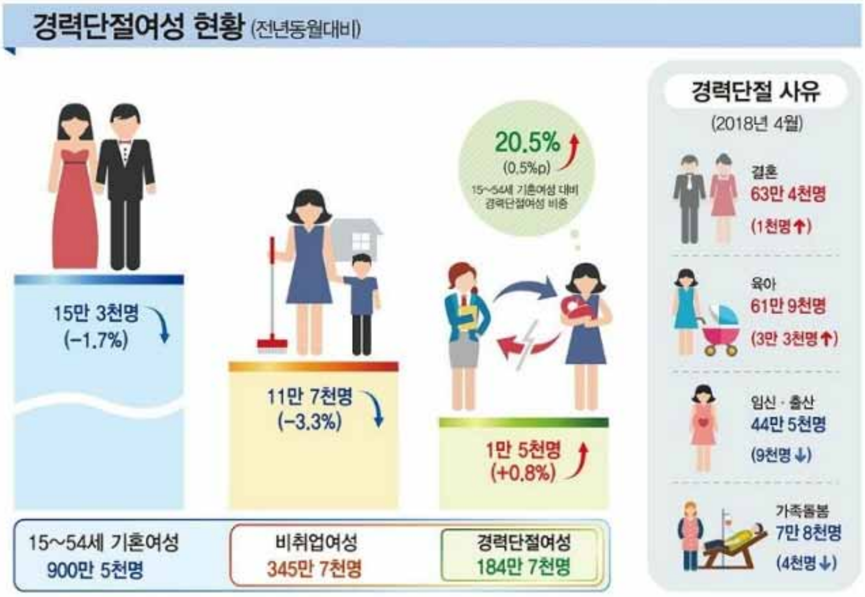
**통계청**

출처-중도일보
2018.7.11

#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고서

통계청. 2018.11.29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정의



#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고서

통계청. 2018.11.29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정의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1년새 크게 증가, 자녀가 많은 여성일수록 직장을 그만 둘 확률도 높게 나타남.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이 63만4000명으로 34.4%로 가장 높았고, 육아는 61만9000명으로 33.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임신·출산이 44만5000명으로 24.1%를 기록했고 가족돌봄 4.2%, 자녀교육은 3.8%로 각각 나타남.

경력단절 기간은 10~20년 미만이 25.5%, 5~10년 미만이 24.7%였고 3~5년 미만은 15.0%, 1~3년 미만은 13.2%, 20년 이상은 11.1%, 1년 미만은 10.6%.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0.8%) 증가

경단녀 규모가 증가한 것은 가족돌봄을 포함해 경단녀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사상 처음.

이미 30년간 지속돼 온 것으로 단기적 해소 대책이 어려운 구조

3차 기본계획이 혼인·출산에 기반을 둔 대책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진화한 대책 필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2018.11.1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삶의 질 제고 / △공동체의 가치 지향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적응이라는 정책목표 재정립의 필요성

▲자동육아휴직 법제화 ▲육아휴직 지원금 현실화(기금마련과 제도개편 함께 논의) ▲출생통보제(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10일)

"여성의 일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당당하게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방안 필요

돌봄서비스 분야에 남성의 제도적 참여 있어야

**노동시장이 여전히 가부장적 프레임에 머물러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을 '잠재적 활용'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함.**

# 4. 충남도 저출산정책, 젠더관점으로 교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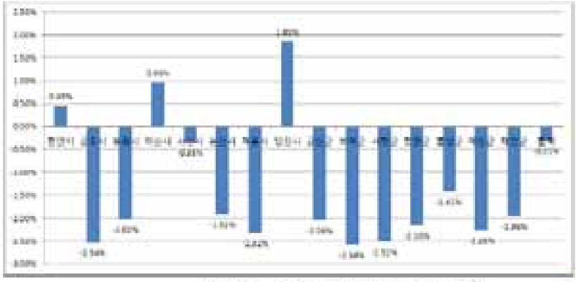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 01 현재와 미래모습 저출산 경향의 지속

■ 합계출산율은 높으나 출생아수 절대 감소
- 출산율 1.42명(전국4위, OECD 1.74명)
- 가임여성수, 혼인건수, 출생아수 등 절대 감소

| 구 분 | 2013년 | 2014년 | 증 감 |
|---|---|---|---|
| 가임여성 수 (15~49세) | 472,610명 | 470,034명 | △2,576 |
| 혼인건수 | 12,482건 | 12,040건 | △442 |
| 출생아수 | 18,628명 (1.44명) | 18,200명 (1.42명) | △428 |
| 평균 출산연령 | 32.06세 | 32.17세 | 0.11 |
| 초혼연령 | 28.84세 | 28.95세 | 0.11 |

■ 2040년까지 출생아수 지속 감소 예상
- 2015년 92,867명 → 2040년에 85,590명 감소
- 충남 전체의 연평균 출생아수 증감율은 -0.31%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출생아수 감소(심재헌, 2016, 충남리포트)



(심재헌, 2016, 충남리포트 제225호)

출처-충남연구원 토론회 발제자료1_충남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최종)_송미영, 2016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 02 현재와 미래모습 초고령 사회로 진입

■ 2014년 기준 16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인구대비 노인인구 20%)

■ 2040 충남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의 고령화
- 초고령 사회인 10개 시ㆍ군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지속가능성, 고령사회인 2개 시ㆍ군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가능성, 고령화 사회인 3개 시ㆍ군의 고령화 사회 유지 혹은 고령사회로의 진입가능성

시ㆍ군별 총인구대비 노인 인구 현황 (송미영ㆍ김희경, 2015)

- 향후 2040년까지 25년간 노인인구 증가율은 7.49%로 전망

| 2020년 | 2030년 | 2040년 | 연평균증가율 |
|---|---|---|---|
| 388,719명 | 543,795명 | 708,065명 | 7.49% |

충남의 노인인구 전망(충남연구원, 2016)

**인구의 초고령화 지속될 것으로 전망**

2/11

출처-충남연구원 토론회 발제자료1_충남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최종)_송미영, 2016

## 04 현재와 미래모습 인구이동의 선택성

■ 인구 이동은 지역사회에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전광희, 2016)

■ 충남은 10-19세 인구가 순유출, 기타 연령대는 순유입(2015)
- 이러한 연령대별 이동의 선택성은 충남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
- 20세 미만의 인구이동은 두 가지 이유.
  ① 피부양자로서 부모를 따라가는 가족이동의 일부
  ② 자녀 교육을 위해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다른 지역의 학교로 보내는 경우

출처: 충남인포그래픽제15호 재구성 (2015년도 데이터)

■ 여자 이동인구의 연령분포는 남자와 다름
- 20-24세 연령대는 작은도시에서 큰도시로의 이동경향이 강함
- 충남 순유입이 시작되는 연령대는 여자는 25-34세, 남자는 35-44세
- 여성 고령층(65세 이상)은 충남으로의 전입보다 전출이 큼, 남자는 반대 흐름

인구의 초고령화 지속될 것으로 전망

2/11

출처-충남연구원 토론회 발제자료1_충남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최종)_송미영, 2016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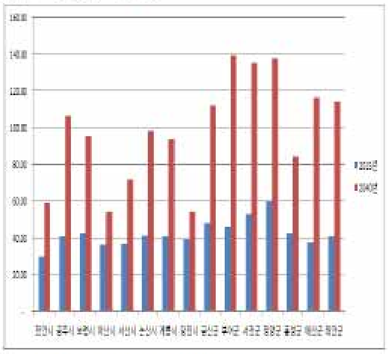
## 05 현재와 미래모습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연관성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관성이 있는 인구학적 사회문제

- 노령화 지수 :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사회의 부양부담을 측정
- 유년 부양비(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하는 15세 미만 유소년층 비율)
-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

■ 노인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부양비 증가 (젊은층 부담 ↑)

- 2015년에 생산가능 인구 1인당 37.23명을 부양
- 2040년경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67.45명을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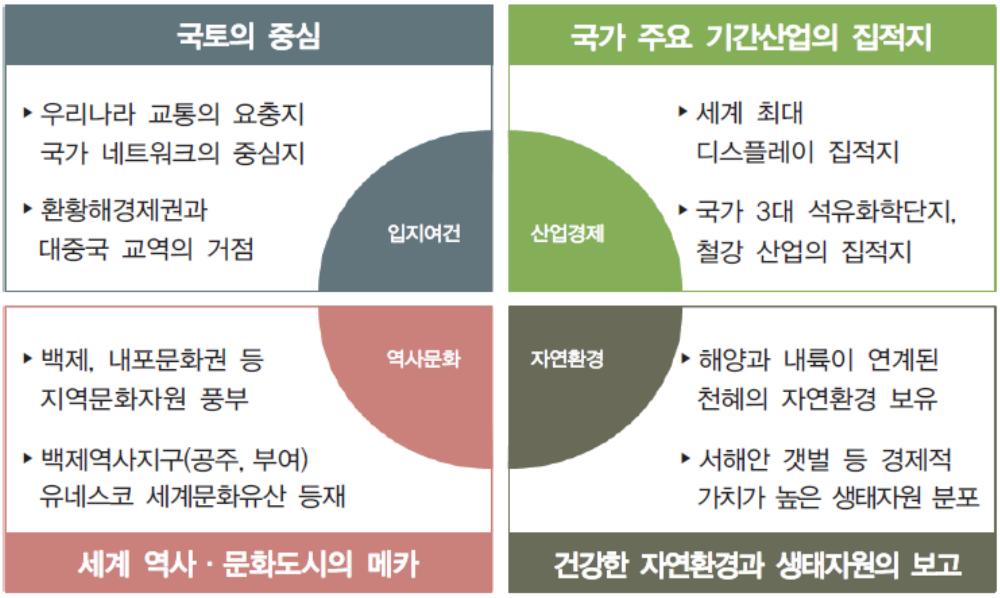
(심재헌, 2016, 충남리포트)

인구의 초고령화 지속될 것으로 전망

2/11

출처-충남연구원 토론회 발제자료1_충남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최종)_송미영, 2016

### 지역특성




## 1 도정여건

○ **저출산 · 고령화 및 사회적 양극화는**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이자 위기**

– **도민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사회 ·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과 상생의 경제구조 구축** 필요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한반도 평화의 움직임은 충남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할 기회**로 작용

–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시대적 흐름과 국제적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 ❶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 편안한 삶과 주거복지를 높여 아이 키우는 가족의 교육비와 주거 부담 경감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 보육지원 및 편안한 주거안정 지원

〔 주요정책 〕

►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 임신 · 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 충남아기수당 도입 : 도내 12개월 이하 영유아 월 10만원 지급

– 조례 제정(9월) 및 첫 지급(11월), 시군 확대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만 3~5세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월 2만원 → 월 64~87천원 지급

►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시간 확대 지원 : 가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4 → 6시간 확대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청과 협의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19.1월)

► 고교 무상급식 : '19년 전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연 190일, 1일1식, 단가 5,880원)


| 【분야 2】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 | | |
|---|---|---|---|
| 2-1 | 충남아기수당도입 | | 69 |
| 2-1-1 | 충남아기수당도입 | 복지정책과 | 71 |
| 2-2 | '직장연합어린이집' 설립 지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확대 | | 73 |
| 2-2-1 |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74 |
| 2-2-2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76 |
| 2-2-3 |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시간 확대 지원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78 |
| 2-2-4 | 교육평등권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 | 교육법무담당관 | 80 |
| 2-3 |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실현 | | 82 |
| 2-3-1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법무담당관 | 83 |
| 2-3-2 | 고교 무상급식 | 농산물유통과 | 85 |

| 【분야 8】 여성이 행복한 충남 | | | |
|---|---|---|---|
| 8-1 |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여성 · 가족 친화 정책 추진 | | 199 |
| 8-1-1 | (가칭) 충남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 여성가족정책관 | 201 |
| 8-1-2 | 다문화교류 및 다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 여성가족정책관 | 205 |

| 【분야 10】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 | | | |
|---|---|---|---|
| 10-1 | 충남 청년 창업 프라자 조성 | | 233 |
| 10-1-1 | 충남 청년 창업 프라자 조성 | 일자리노동정책과 | 235 |
| 10-2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 | 237 |
| 10-2-1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 일자리노동정책과 | 238 |

## 02 문제에 대한 해법
#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해법

■ **저출산 대응전략**

◉ 젊은 층이 유입할 수 있게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층이 충남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 등)

◉ 성 평등한 사회 참여와 성평등 의식 · 문화

(출산장애요인 지원: 아픈 아이 돌봄,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돌봄 휴가제도' (스웨덴, 덴마크)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이 조성(탄력근무, 노동시간, 임금격차 해소)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과 인권보장 (가족정책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

– 출생아수의 증가도 중요하겠으나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 인권지향적인 충남 지향

– 이주아동의 유형을 고려하여 취약한 사회권의 보장, 지역주민의 이주민 수용성 제고 및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등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전략**

10/11

02 문제에 대한 해법
문제를 풀

■ 저출산 대응전략
◉ 젊은 층이 유입할 수
(청년층이 충남으로
◉ 성 평등한 사회 참여
(출산장애요인 지원: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 다양한 가족에 대한
– 출생아수의 증가도
어울려 살아갈 수 있
– 이주아동의 유형을
지역 차원의 지원체
저출산 & 고령화

비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5대 목표

- 1.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 2. 풍요롭고 쾌적한 삶
- 3. 활력이 넘치는 경제
- 4.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 5.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들이 살피는 것 반드시 필요!**

성
평
등

**같음으로서 성평등**

여성과 남성이 갈아지기 위해, 동등한 권리, 자격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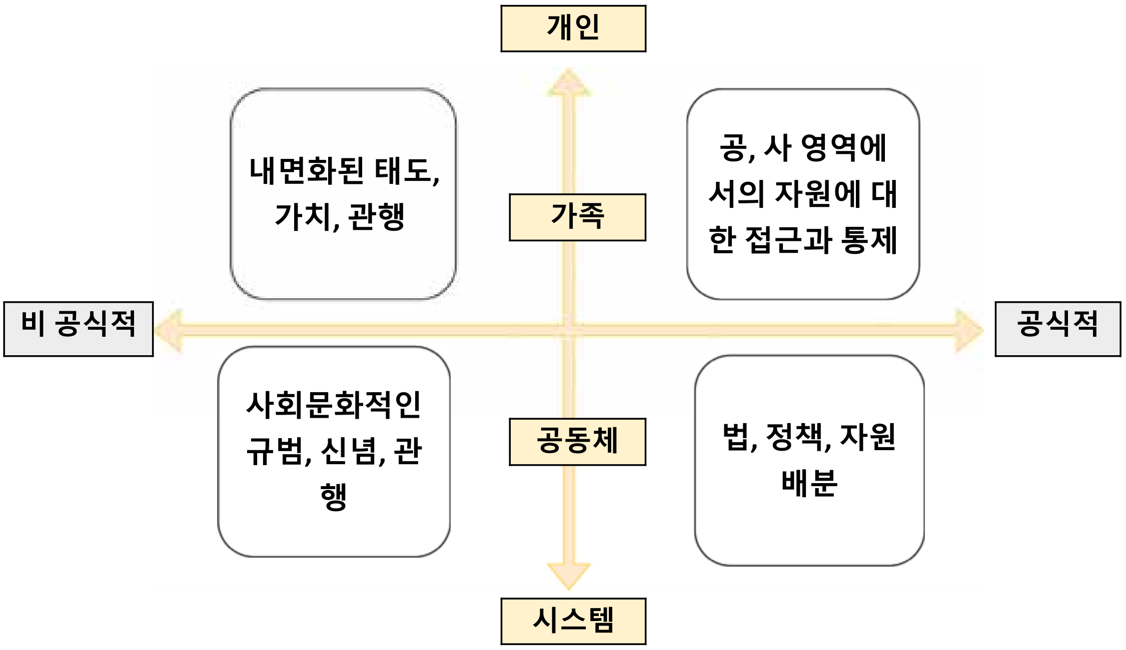
**차이를 인정하는 성평등**

같아진다는 것은 남성이 되는 것이니 차이 인정하는 방식,
서로 존중하는 방식
> 여성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가져가는 것

**변혁으로서 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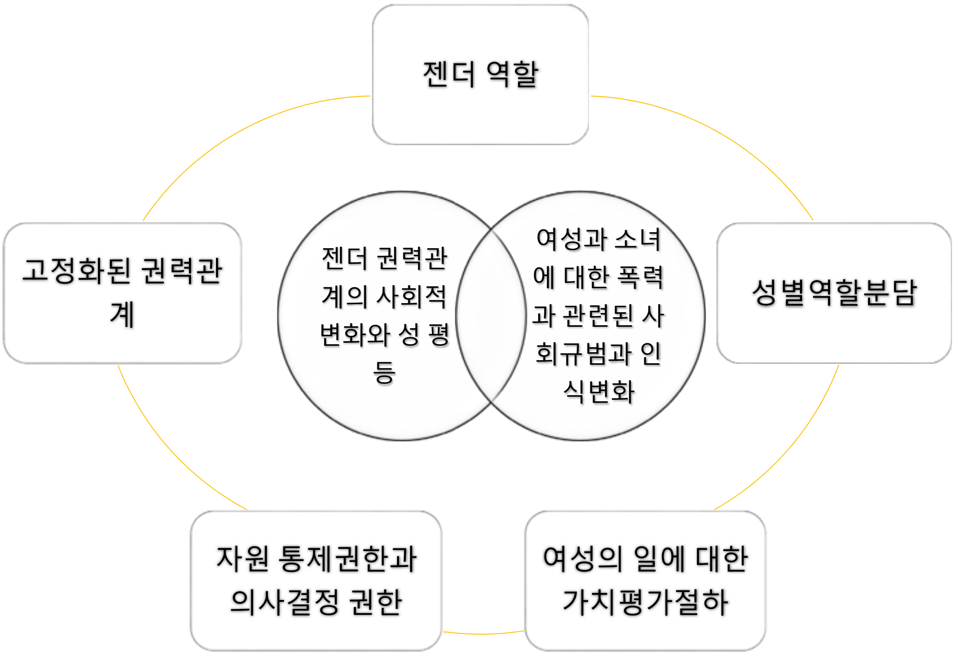
궁극적으로는 차이를 존중(여성할당제) 하면서 동시에 평등을 쟁취하자는 것

# 젠더 통합적인 사회변화 (Transformative Approach)




출처-Post-2015 SDGs (2016~2030)시대의 젠더 정치와 여성운동(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대한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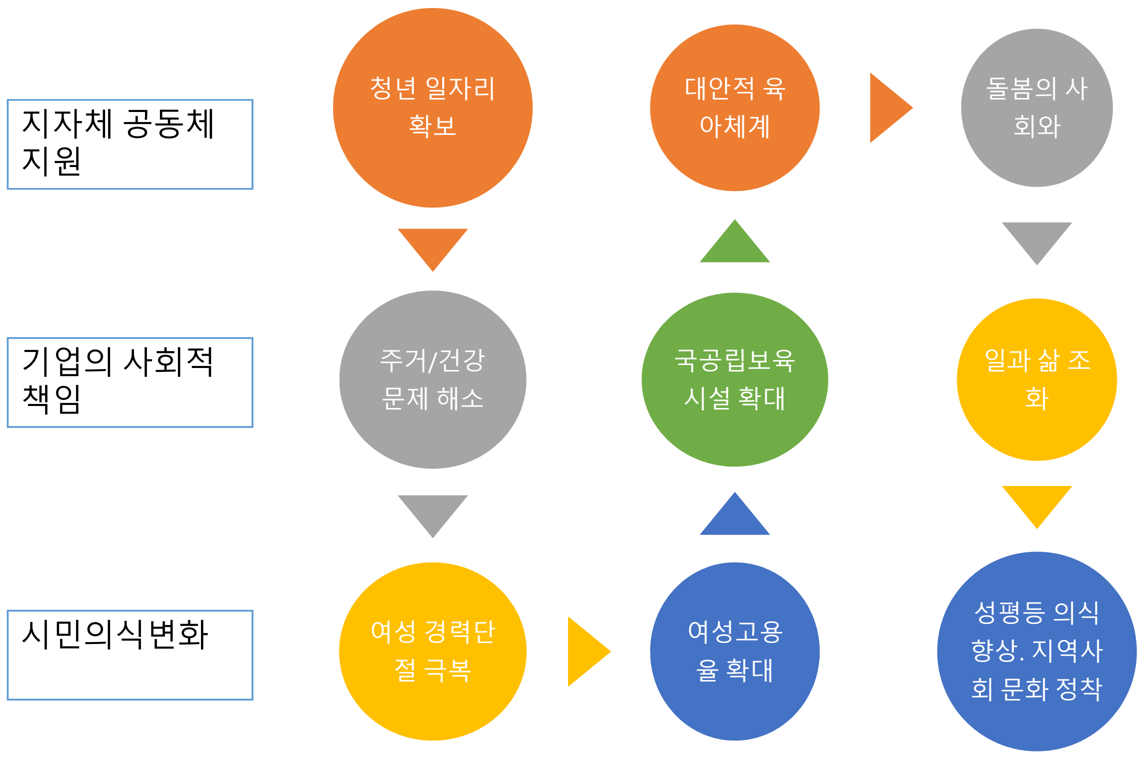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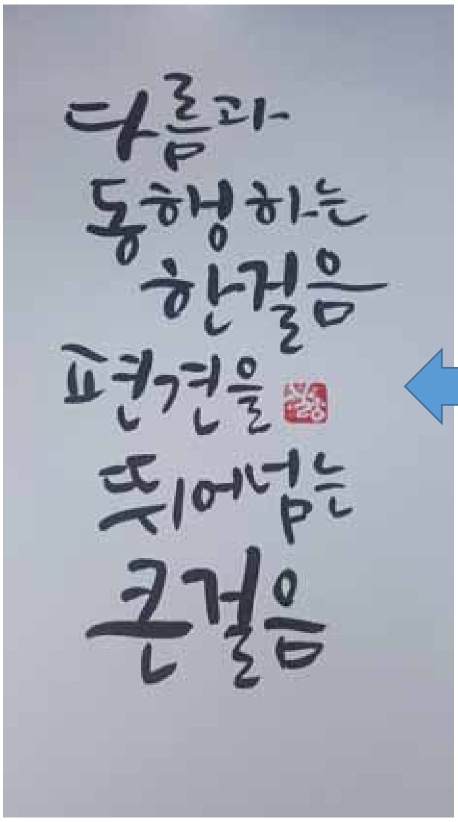

출처-Post-2015 SDGs (2016~2030)시대의 젠더 정치와 여성운동(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 젠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출처-Post-2015 SDGs (2016~2030)시대의 젠더 정치와 여성운동(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 저출산극복?! 가치와 같이 + 씨실과 날실






**저출산 아닌**
**저출생 극복의**
**해법 0순위!**

**고맙습니다!**

# 지정토론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 37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저출산과 초고령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거버넌스 ··· 39
문지희(논산 마을활동가)

☞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여성단체 역할 제고 ··· 43
최연숙(당진시의회 의원)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 47
신희정(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바보야,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야” ··· 51
박주영(연합뉴스 기자)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구현 ··· 55
이태규(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김 영 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기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의 한계 봉착

- 인구정책, '출산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
  ※ 행자부 "가임기여성 지도" 파문
- 출산율 상향 목표에만 방점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격차와 차별해소, 성평등

- 여성가족부의 권고: 저출산 정책에서 출산율 등 수치목표를 없애고 비혼 출산 지원 등 강화할 것을 권고
- 고용, 교육, 주거, 돌봄 등 삶의 전반적인 환경과 여건에서 격차, 불평등을 개선해야만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

○ 미혼 인구의 결혼관련 태도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년 : "결혼의향 있음" 남성 74.5%, 여성 64.7%
- 2018년 : "결혼의향 있음" 남성 58.8%, 여성 45.3%

※ 일본의 '1억 총활약 플랜'(2016.6 확정)의 시사점
- 격차와 차별 개선에 집중

※ 독일의 저출산 정책의 시사점
- 보편적 사회보장 확대, 실질적 성평등 보장, 남성 돌봄참여 확대

⇨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보편적인 사회보장 확대, 실질적인 삶의 질 증진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 출산율 목표가 아닌 분야별 성평등 목표 제시 필요

⇨ 저출산 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결합 필요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성평등 관점의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틀’, ‘통로이자 도구’로서의 젠더 거버넌스

✣ 좋은(good) 젠더거버넌스의 조건

① 여성의 주도적 참여 확보

② 젠더 관점에서의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개입/영향력

③ 성평등 관점의 거버넌스 시스템 작동, 구축

저출산 정책 추진에서의 젠더거버넌스 강화

○ 저출산 정책 추진에서의 젠더거버넌스의 기능

–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 실행력을 높이는 것

– 성평등 관점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기존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

– 저출산 정책의 성평등 목표 제시, 설정 과정에 개입

○ 정책 추진에서의 젠더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

– 도, 시군단위 젠더거버넌스 정책 강화

– 주요 정책별 작은 단위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NGO]

– 거버넌스 주체로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참여와 역할 확대 필요

# 저출산과 초고령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거버넌스

문 지 희
논산 마을활동가

❍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양질의 삶을 누리는 충남을 구현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발돋움하자는 것”을 위한 일환의 충남도 비전

Q. 충남도는 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정책을 도출하였는가?

Q. 이와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안내(소통)가 있었는가?

Q. 실무자 및 전문가 외 도민들에게도 충남도 사업 및 정책의제 제안의 기회가 주어졌는가?

Q. 또한 충남도가 실행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 충남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결과 보고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 제안한다.
학계에서는 젊은 층이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면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가설이다.
결국 출산 가능 한 청년이 희망을 갖는데 초점을 두고 충남도민 모두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정책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주민을 찾다.
-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내 활동 가능한 주민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정 필요

Q. 충남도의 저출산·고령화·사회 양극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제안 및 참여를 원하는 주민, 단체, 전문가들을 얼마나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힘을 썼는가?

Q. 다양한 구성원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연령과 계층 등을 고려하여 발굴하였는가?

Q. 발굴된 도민들이 교육, 간담회, 활동 및 결과 발표 등 정책과 사업, 제도의 이해에 대한 행사와 시간이 지역마다 충분히 있었는가?

Q. 발굴하고 양성된 도민들에게 활동의 기회만 주어지진 않았는가?

Q. 주요 역할에 대한 정확한 위촉과 활동에 대한 수당은 지급 되었는가?

※ 도민 참여 방식 및 참여 활동 진행 사항에 대한 대책의 모색을 바람.

❍ 기관에서 만든 사업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수행

– 네트워크 망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가교 역할

사례) 행복교육지구 학교 밖 행복마을학교 육성 지원 사업

: 주민, 학부모, 교사가 스스로 마을 내에서 공동체 회복하기

◎ 아이들과 함께 주민들이 우리 마을 알아가기

◎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우리 마을에서 즐겁게 놀기

◎ 마을 어르신께 아이들이 마니또 되어주기

◎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을 내에서 배우고 학습하기

❍ 저출산에 대해

1960년대 중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전쟁이 끝난 당시 심각한 빈곤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도록 권했던 것이다. 장기적 결과를 투영하지 못한 당시 사회의 현상만을 반영한 국가 정책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며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OECD 국가 중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를 넘어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OECD 국가 중 1명 이하로 하회하였다.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 미혼 인구 증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시설 포함)은 부족하여 여성이 활동을 하며 육아를 해야만 하는 환경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육아 지원 서비스 중 자녀의 보육 전담 시설에서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는가?

작년 여름, 가족이 운행하던 차량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잇따라 아동 사고가 발생하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에 대한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에 동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2018년 7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2019년 1월25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에서 100% 설치 완료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총 3곳 뿐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설치 현황을 취합중이다.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7일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제53조에 의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해결책도 이렇게 정부가 나서야 하고 정책에 의해 보호된다.

❍ 출산 장려 정책 중 아동수당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대상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80여 년 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도 1975년이 되어서야 보편적 가족정책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다.
1987년부터는 성인 자녀도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으며 게다가 25세 이하로 소득에 따라 결혼한 자녀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글에 따르면 독일의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 돌봄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은 분명하나 한 편, 저출산에 대응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여성단체 역할 제고

**최 연 숙**
당진시의회 의원

미래학자(John,Naisbitt)는 21세기는 3F시대라며, 여성성(Female), 감성(Feeling), 상상력(Fiction)이 21세기의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이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여성성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며, 여성의 소프트함과 치밀함,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관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에서 남녀간 불평등한 사고를 수치적 계량한 "성 격차지수(GGI:Gender Gap Index)"는 한국은 1점을 기준으로 0.635점으로 136개국중 11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5.6%, 남녀간 임금격차수치 37.4%, 여성의 대표성 17%(여성국회의원) 매우 낮은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성평등이 이미 이뤄졌다는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에는 능력있는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독박육아와 사회적 차별에 좌절하여 결국은 심각한 저출산국가가 되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있지만, 저출산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14개 시,군에서는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지고, 저출산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실질적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한 저출산을 극복하기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여성의 능력과 성평등을 공공재로 보는 관점과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되도록 적극적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경영학자 톰 피터스의 3W시대, 세계화(World),웹(Web),여성(Women),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브올루션(EVEolution)으로 여성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사회전반에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21세기는 성평등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성평등의 실현없이는 선진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 충남여성들은 어디쯤 왔는가를 생각해 본다. 충남도에는 여성단체가 100여개의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충남여성단체협의회가 1984년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 풀뿌리조직 및 단체, 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등등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연대와 세력화는 미미한 정도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이슈화되었지만 이런 문제에 동참하거나 연대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움직임은 저조하였다. 이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에서 사회적 이슈의 관심과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가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여성들의 연대가 필요할 때 과연 이 많은 여성단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 및 문제의식 제기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여성단체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반성적 평가가 요구된다. 현재 충남의 여성단체는 여성들과 사회에 어떤 조직으로 무엇을 위한 단체가 되었는지, 향후 활동의 방향과 시대적 요구와 급변하는 사회에 여성단체들의 역할론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성찰이 요구된다. **첫째**, 적극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실천적 전략 및 정책을 만들도록 여성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여성정치인들은 열악한 사회구조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정책을 만들었는지, 지역여성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였는지, 여성단체들은 이런 여성정치인들에게 정책적 제언이나 활동에 대한 서포터즈를 했는지, 여성의 세력화와 연대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강력한 젠더연대를 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둘째**, 사회의 불안정으로 인한 안전한 사회와 평등한 사회 즉 젠더폭력과 성차별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시대정신으로 요구되는 현실로 사회적 불안의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2018년 “82년생 김지영”의 소설과 서지현검사의 미투 시작으로 학교에선 “스쿨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문제제기를 했는지 묻고 싶다.

**셋째**, 이런 사회적 불안요소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젠더관점의 정치권의 인식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었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맞는 활동을 하였는지, 세대교체 및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리더를 인큐베이팅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넷째**, 기득권을 수구하고 대표성의 독점과 폐쇄성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로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여성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섯째**,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합류하지 못하고, 현재는 젊은 여성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로 여성단체들은 회원 모집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 상황이다. 그동안의 여성단체는 정책결정과정과 정책들을 홍보하고 여성을 동원하는 정도의 인식과 여가선용적 활동 및 친목 및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는 성역할고정관념과 수동적 활동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왔다. 충남여

성단체리더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사회봉사의 한계적 역할에서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한 방향제시가 요구된다.

현시대의 이슈가 되는 성 격차해소, 인권, 노동,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 심화 등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행정의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 및 매개역할을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여성단체의 향후 실천과제는 여성의 역량강화, 연대를 통한 세력화로 정치적 대표성 즉 의사결정권의 강화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협력적 관계는 지역여성들의 권익과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젠더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 성인지통계의 집행결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참여로 충남여성단체의 활동의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진보와 보수 이념을 초월한 사회의 흐름과 가치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성평등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충남여성단체로의 변화가 시급한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충남여성단체협의회와 시·군의 여성단체회장들의 이원화 방향으로 가고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성단체들 및 행정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로 인한 충남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단체로 조직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존의 폐쇄적 운영방식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수평적관계로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산적한 여성의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경쟁”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에 중요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신 희 정**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사회변화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대

– 개개인의 생활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에 관심 증가

–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로 가족구성과 가족 내 역할수행의 변화, 결혼과 가족구성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가족구성을 매우 유연하게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가족구성에 대한 유연한 인식은 청년세대에서 두드러짐. 이로 인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청년세대가 결혼과 가족에 대하여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관련된 연구들의 살펴보면,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 환경으로 노동시장과 가족에 주목함. 즉, 개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생활과의 균형을 이루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며, 가족 내 역할과 긴장을 해소하여 다소 느슨한 관계맺음이 인정되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장시간 근로와 출산율은 부적인 관계(주제발표 참조)
> • 남성의 육아참여와 출산율은 정적인 관계(주제발표 참조)
> • 결혼과 출산의 연계성이 약화됨으로써 다양한 가족과 다양한 가족에서의 출생아동의 사회적 지원과 출산율은 정적인 관계(홍승아, 2016년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
> • 일과 생활의 균형, 평등한 가족문화, 노동시장에서의 성격차 해소, 돌봄의 연속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중요한 요소임(홍승아 외, 성평등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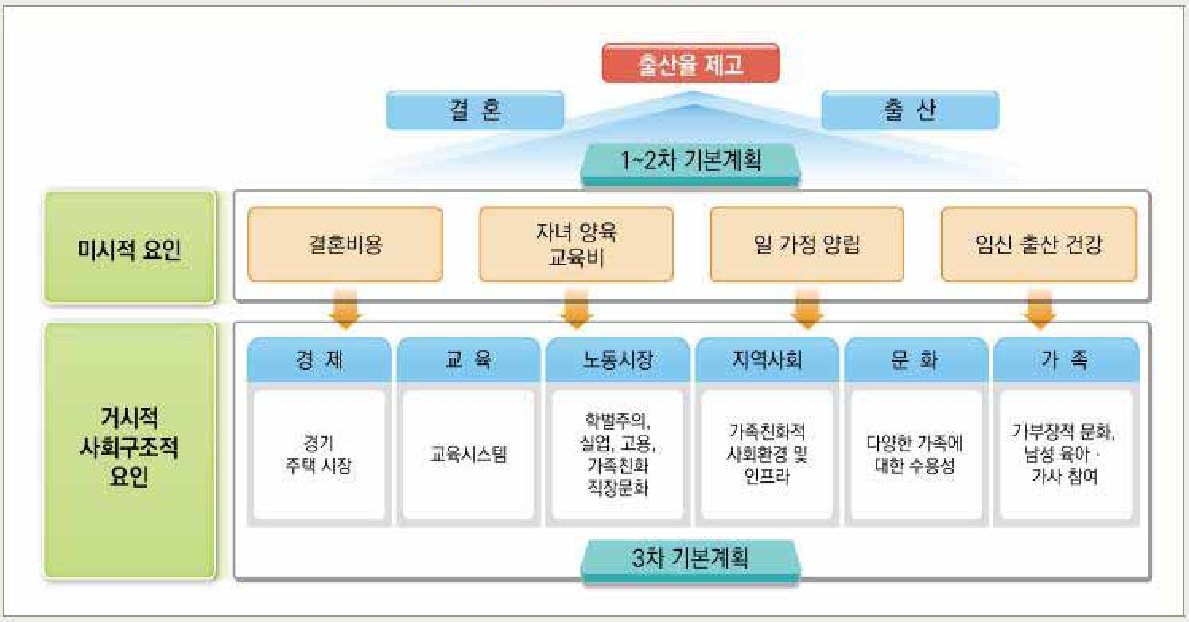
## □ 정부의 저출산정책

– 이전의 저출산 대책은 보육 및 양육,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기존의 선별적인 복지 보다는 진일보하여 가족의 부담을 사회적

으로 분담하고자 하고, 보편적인 욕구로서 인식하게 되었지만 전통적인 가족 기능을 보완하고 모성권을 보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고용, 주택, 교육, 문화 등의 다각적인 영역에서 구조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고,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을 지향하고자 함.

〈3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 확장 방향〉




-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새로운 가족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 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민간의 협력이 중요함. 결국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가족 및 지역 공동체를 통한 개인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한 시민사회의 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함께 요구됨.

## □ 젠더이슈 및 충청남도 현황

- 최근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젠더갈등 심화
- 연령주의와 젠더갈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개별적인 선택의 영역으로서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됨
- 따라서 저출산의 주요 기제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및 가족에 대한 접근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젠더이슈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접근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충청남도의 지역성평등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고, 충남 가족실태조사 결과 평등한 가족문화가 미흡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도 낮은 편임.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다방면의 영역에서 가족친화적이고, 성평등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남도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중요시 되어야 함.
- 현재의 충남의 저출산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 주제발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충청남도의 인구이동의 특성을 보면 교육과 노동시장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힘들고, 젊은 세대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보다 촘촘하게 일, 생활 가족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됨.

## □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에서..

- 현재도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하여 청년창업과 청년의 교육을 지원이 계획되어 있지만, 보다 다양한 지역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젠더거버넌스 접근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보다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지원이 요구되는데, 실제 여성농업인의 발언(양성평등 포럼에서)이 인상적이었음. 농업인 지원이 거의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 여성 등의 개별 농업인을 지원하기 보다는 남성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인 주체로서의 성장에 한계가 있고,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 및 여성 농

업인 발굴 및 지원 등이 성평등하고 젊은 세대 들이 정착하고자 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목소리임을 알려주고 있음.

- 또한 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도 기대 자녀수가 둘 이상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교육 부담에 대한 접근이 저출산 대책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충남의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도 자녀교육과 밀접히 관련됨.
- 대도시와 비교하여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교육을 위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머물도록 하는 지역의 공공과 민간, 시민들의 협업 사례가 중요하리라 생각됨.
- 예를 들어, 학교교육과 지역특화 사업의 연계하는 정책(특성화 고등학교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이나 사교육 시장에서 부담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공공화 하는 노력에서 부, 모가 모두 배제되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조적인 모임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지지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공공이 서비스를 공공화하도록 하는 정책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바보야,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야”

**박 주 영**
연합뉴스 기자

2016년 발간돼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 커피 1500원이었어. 그 사람들도 같은 커피 마셨으니까 얼만지 알았을 거야. 오빠 나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실 자격도 없어? 아니, 1500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라도 그래. 내 남편이 번 돈으로 내가 뭘 사든 그건 우리 가족 일이잖아. 내가 오빠 돈을 훔친 것도 아니잖아.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딸아이를 데리고 카페에 간 주인공이 맘충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좌절감을 토로하는 장면이다. 단지 허구에 기반한 소설이라기엔 현실과 너무 맞닿아 있어 82년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의 여성들이 처절하게 공감한 이야기였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고추를 달지 못한 존재’로 태어나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에 삥을 뜯는 ‘된장녀·김치녀’라 불린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는 ‘맘충’이라 손가락질 받고, 아이를 출가시키고 나서는 남에게 폐만 끼치는 ‘김여사’라 무시당하며 살아야 한다.

애완동물은 괜찮지만 아이는 안 된다는 ‘노키즈존’이 넘쳐나는 사회, ‘디시인사이드’는 집단 지성 커뮤니티이지만, 맘카페는 할 일 없는 전업주부들의 모임이라고 매도하는 사회에서 아이를 기꺼이 낳고 싶은 여성은 없을 것이다.
지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들은 대부분 출산지원금, 양육지원금 지원에 머물러 있다. 지금의 여혐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주더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에서부터 양육지원금까지 각종 인센티브를 앞 다퉈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눈에 보이는 출산장려금 올려주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위장 전입을 하거나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만 머무르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부작용도 생긴다.

그러자 일부 지자체는 '먹튀 산모'라는 표현을 써가며 여성을 비난하기도 했다. 아이는 여자 혼자 낳는 게 아님에도 말이다.
일회성 지원 말고는 보육 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산부인과도 없는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는가. 아이는 낳았지만 기를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전국 243개 지자체 별로 가임기 여성인구 수를 통계로 정리하고, 이를 공개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전국 가임 여성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 증가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이 같은 통계자료를 작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우량 암소 통계를 내는 것처럼 출산 지도를 만들어온 것이다.
가임기 지도로 한차례 홍역을 겪었음에도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이 '2018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한다며 한 아파트 현관문에 '가임기 여성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게시한 것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다.

조사에 포함된 문항도 문제가 됐다.
5번 문항을 보면
'가족 내 부부의 역할과 관련한 다음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3)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4)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등의 답을 1부터 4까지 찬성하는 정도로 표시하게 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출산을 여성의 의무로 규정짓고, 자녀의 양육 책임을 사회가 아닌 개인, 특히 여성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욱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보장하고, 아동의 보육·교육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선진국과 비교되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 미만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며, 압도적인 꼴찌다.

인센티브 제공에만 머물러 있는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해 조금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노후 세대를 부양할 젊은 층이 부족해서… 인구 소멸의 위기 때문에” 라는 접근법은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양육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출산의 주체인 여성을 보는 시각을 개선하는 일이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주부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놓고 아침 드라마나 보며 편하게 논다든지, 아동수당을 받아 자신의 화장품이나 옷을 사는 데 써버린다고 보는 시각으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저출생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결혼과 출산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당연시되고, OECD 기준 꼴찌인 남성의 가사분담률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는 보육시설에 맡기지 말고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3세 신화’도 깨져야 한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만 우리 사회 3대 위기라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구현

**이 태 규**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

○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출생아 감소 등 악화 지속,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민선 7기 도정의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 **작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추진, 점진적·지속적 출산친화 환경 조성**

## Ⅰ 그동안 추진실적

○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
- 관공서 및 병원, 은행 등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2,773개소)

○ **임산부 우대금리상품 지원**
- 도내 거주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자 대상(하나은행, 농협)
- 기본금리+우대금리(0.75%~1.5%), 134건(예금 39, 적금 95)

○ **취약지역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지원**(70명등록, 23명 이용)
-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 거주, 임신~출산 후 6개월 미만자

○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18.8.1. 시행, 충남TP등 16개 기관 169명참여)
-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 /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

○ **출산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18.10.1. 시행)**
- 첫째, 둘째 출산시(여성): 1회당 가점 1.0점 부여(최대 2.0점)
- 셋째 이상(남·여): 3자녀(1회당 1.5점, 최대 3점), 4자녀(1회당 2점, 최대 4점)

○ **도청직원부터 임산부 배려를 위한 다짐대회('18.8.1.)**
- 동료(배우자)임신·출산에 대한 축하와 배려 ②장시간 회의·야근 자제
- 시차 출퇴근제 사용 및 출산 전·후 휴가사용 권유 등 5개항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육아 부담 완화**(18.12.18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 → 10일

– 모성보호시간 확대(1일 2시간) : 임신 12주이내, 36주이상 → 임신 全기간

○ **충남 아기수당 지급('18.11.20. 시행)**

– 출생월∼12개월이하 모든 아이 / 아기 당 월 10만원

## Ⅱ 2019년 추진계획

### 1 일 · 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인식개선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및 맞춤형 인구교육

– 시군별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1개 프로그램 이상)

– 맞춤형 인구교육(인구보건복지협회 및 시군) : 총 160회 17천여명

○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20백만원)

– 실직적인 만남의 장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 확대(년 2회 이상)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공영매체(TV, 라디오, 신문) 및 별도 프로그램

○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 지속 추진

– 임산부 우선 창구 운영 활성화 및 임산부 우대금리 적용 은행 확대

○ 도·교육청 합동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

– 3대 무상교육지원(교육·급식·교복),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협력체계 강화

– 교육청·학교·시군·마을 등과 협력,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15개소 설치·운영

### 2 건강한 임신·출산 및 산후지원 강화

○ 모자보건사업 지원 사업 확대

–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30%이하 → 180%이하)

–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지원 상향(만40세이하 → 만44세이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1인기준 1백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용률 제고(서비스 이용률 30% → 33%)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00%이하

-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한도400천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인당 1,200천원이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1인당 3,000천원 이내)

○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난청조기진단비 건강보험료 적용

### 3 수요자 맞춤형 보육 아동 양육 지원 확대

○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 간 차액 지원(64~87천원)

○ 충남형 24시간제 전담어린이집 설치 운영
- 구)도지사 관사 활용, 주·야간 긴급히 발생하는 보육수요 지원

○ 평가인증 가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19.1.시행)
- 1일 2시간 확대(4시간→6시간) / '19예산액 : 164억원

○ 아동수당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미지 제고
- 아동수당 확대 : 만6세 미만 소득무관 월10만원('19.1.) 만7세미만('19.9.)
- 충남아기수당 : 만12개월 이하, 소득무관 월 10만원, 확대방안검토

○ 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체계 강화
- 자립수당 신설('19.4월 30만원), 주거지원 통합서비스(30호, 무료 원룸형)
-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1:1 지원서비스(3개소)

○ 아동보호시설 확충으로 아동학대 보호·신고 신속 대응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3→4곳) 및 학대피해아동쉼터(3→4곳)신설

○ 지역사회 중심의 다함께 돌봄 센터 증설(4개소 →2개소)

### 4 3대무상교육 및 청년·신혼부부 장기 임대주택 공급

○ 고교무상교육(2019.3월 시행)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지원(전 학년 대상)

○ 고교 무상급식(2019.3월 시행)
- 지역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 지원(118개교 전 학생)

❍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2019.3월 시행)

- 중학교 신입생 전원 교복 지원

❍ 교육평등권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차액지원(2020.3월 시행)

- 사립유치원 대상(136개소), 1인당 매월 최대20만원

❍ 청년·예비 신혼부부 장기 임대주택 공급

- 선도사업 1천호 추진('19～'22년)

# 메 모

# 메 모